

|                  |
|------------------|
| 제410회 국회(정기회)    |
| 국    정    감    사 |

# 주요 업무 현황

2023. 10. 19.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    |
|----------------------------------------|----|
| I . 업무 현황 .....                        | 1  |
| II . 예산집행 현황 .....                     | 4  |
| III . 주요 정책·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         | 5  |
| IV .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17 |
| V . 2023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33 |
| VI .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               | 35 |
| VII .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             | 37 |
| VIII .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 | 42 |



# I. 업무 현황

-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2.29.)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1 주요 기능

### 부패방지

####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
- 청탁금지·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부패영향평가

### 권익구제

####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 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국민소통·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운영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책환류
- 정부합동 민원안내·상담 및 국민콜110

## 2 구성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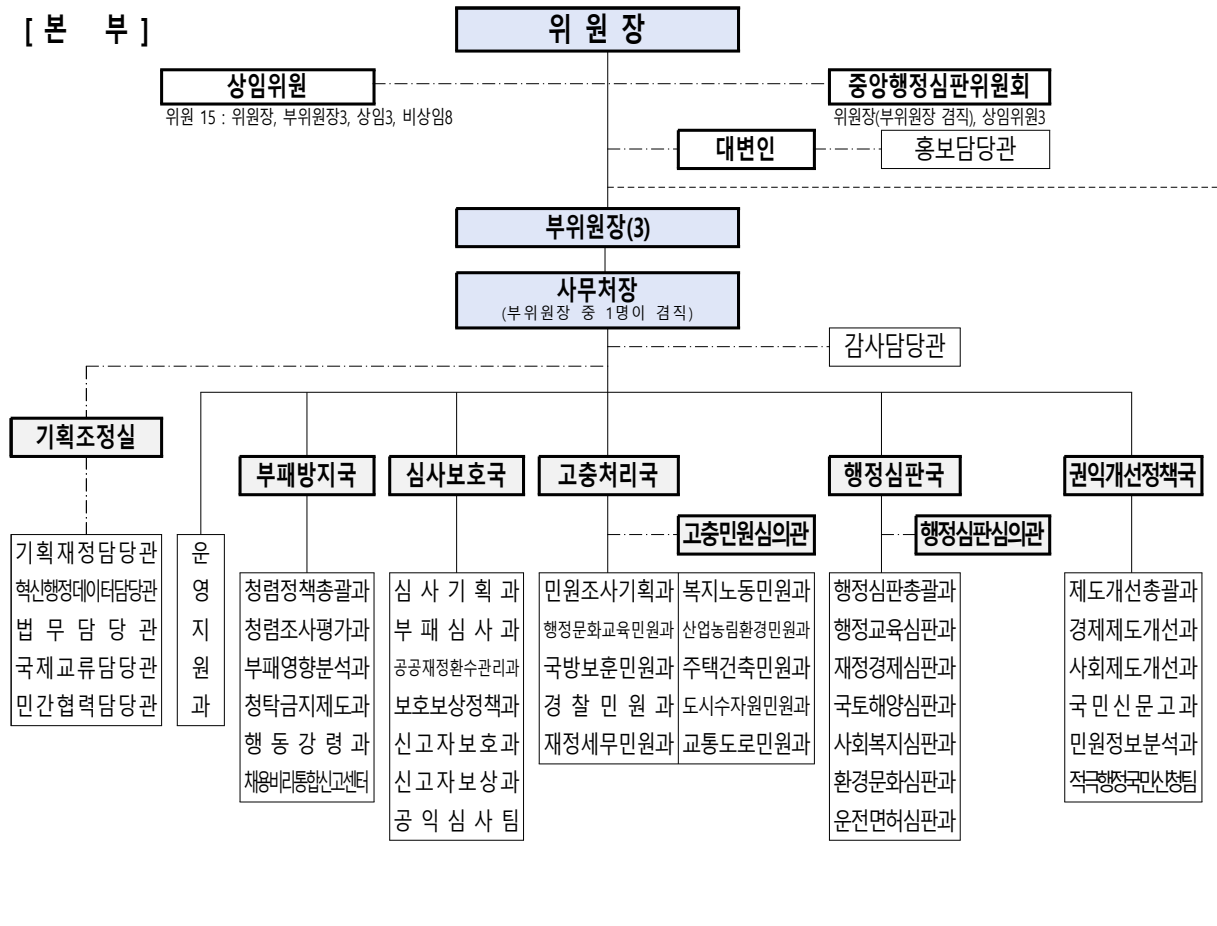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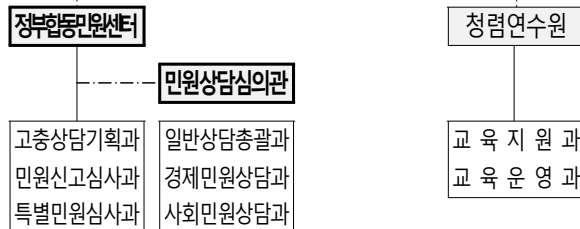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3팀 2소속기관

※ 직제 외 기구인 고충처리국 긴급고충조사과(자율기구), 행정심판통합기획단(임시조직)은 미포함

[ 본 부 ]



[소속기관]



○ 정원 : 565명('23.9.30. 기준)

| 구분 | 계   | 정무직 | 고공단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이하 | 연구직 | 전문<br>경력관 | 특장직 |
|----|-----|-----|-----|------|----|------|-----|------|-----|-----------|-----|
| 계  | 565 | 4   | 17  | 14   | 36 | 42   | 205 | 235  | 1   | 8         | 3   |
| 본부 | 486 | 4   | 15  | 13   | 30 | 40   | 181 | 192  | 1   | 7         | 3   |
| 소속 | 79  | -   | 2   | 1    | 6  | 2    | 24  | 43   | -   | 1         | -   |

### 3 예산

□ 총 950억원 : 인건비 478억, 기본경비 74억, 주요사업비 397억

※ 주요사업비 : 39,693백만원

|                           |           |
|---------------------------|-----------|
| - 청렴권익문화확산 .....          | 2,025백만원  |
|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         | 11,213백만원 |
|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       | 1,214백만원  |
|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 | 11,644백만원 |
| - 국민고충해소 .....            | 1,331백만원  |
|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 11,197백만원 |
| - 행정심판 .....              | 1,069백만원  |

### 4 소관 법령

| 종류          | 법령명                                 |
|-------------|-------------------------------------|
| 법률<br>(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 행정심판법                               |
| 대통령령<br>(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행정심판법 시행령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공무원 행동강령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총리령<br>(3)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Ⅱ. 예산집행 현황

( '23. 9.30. 기준, 단위: 백만원 )

| 사 업 명                     | '22예산* | '23예산* | '23집행액 |
|---------------------------|--------|--------|--------|
| 국민권익증진                    | 92,793 | 94,958 | 66,684 |
| □ 인건비                     | 47,062 | 47,784 | 34,640 |
| □ 기본경비                    | 7,798  | 7,481  | 4,812  |
| □ 주요사업비                   | 37,933 | 39,693 | 27,232 |
| ○ 청렴권익 문화확산               | 1,941  | 2,025  | 569    |
| 청렴권익 정책 알리기               | 1,941  | 2,025  | 569    |
| ○ 청렴권익 행정정보화              | 8,752  | 11,213 | 6,893  |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5,640  | 5,433  | 4,740  |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3,112  | 5,780  | 3,953  |
| ○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 1,197  | 1,205  | 695    |
| 반부패 기술지원(ODA)             | 168    | 160    | 122    |
| 청렴권익국제교류                  | 357    | 382    | 241    |
| 청렴권익민간협력                  | 672    | 663    | 332    |
| ○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소통 활성화   | 11,266 | 11,644 | 7,693  |
| 부패·고충 제도개선                | 97     | 97     | 71     |
| 종합상담창구 운영                 | 11,169 | 11,547 | 7,892  |
| ○ 국민고충 해소                 | 1,331  | 1,331  | 954    |
| 고충민원 조사활동                 | 1,331  | 1,331  | 954    |
| ○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 12,363 | 11,197 | 7,567  |
|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 2,507  | 2,644  | 1,772  |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592  | 2,152  | 1,346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 90     | 94     | 53     |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3,002  | 3,370  | 2,948  |
| 공익신고제도 운영                 | 2,805  | 1,385  | 929    |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 727    | 854    | 294    |
| 청탁금지제도 운영                 | 344    | 293    | 107    |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296    | 281    | 33     |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 -      | 124    | 85     |
| ○ 행정심판                    | 1,083  | 1,078  | 791    |
| 행정심판 운영                   | 1,083  | 1,078  | 791    |

\* 예산현액(전용 등 반영) 기준



### Ⅲ. 주요 정책 · 사업 추진성과 및 계획

#### 1 주요 추진성과

##### 1.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추진

- 고충민원 : 총 37,199건 처리, 4,085건 해결('22.11.~'23.9.)
- 집단민원 : 총 328건 처리, 200건 해결('22.11.~'23.9.)
- 행정심판 : 총 26,715건 처리, 1,083건 인용 해결('22.11~'23.9.)

#####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안전·재난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와 관련한 **4,085건의 국민고충 해결**('22.11.~'23.9.)  
※ (주요사례) △학생안전 확보 등 의무적 이행사업을 위해 자사고에 시설사업비 지원,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권고 등
-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서비스 취약 지역인 도서·벽지, 농어촌의 소외·취약계층 대상 고충 집중 해소  
※ '22.11월~'23.9월 총 96회 운영하여, 2,191건 민원 상담 및 1,338건 현장해결 지원

##### □ 집단민원 및 빈발민원 적극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의 저감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정을 통해 **200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 확산 방지**('22.11.~'23.9.)  
※ (주요사례)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정산 지연으로 지체된 영주댐 준공 조정(33,434명),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을 연결하는 대체통로 마련(1,438명) 등 총 102,155명 수혜
- 생활 속 반복·빈발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민원유발요인 제거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23.7.),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피싱사기 피해 개선('23.8.) 등

##### □ 공정하고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행정심판 사건 총 **26,715건**을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083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22.11.~'23.9.)
- 국민중심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및 행정심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 기관(66개 특별행심위) 및 온라인시스템 통합 추진  
※ 통합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 BPR/ISP 용역 완료('23.8월)

##### □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 방문, 전화, 서신, 인터넷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하여 각종 민원 상담 및 서류 접수의 국민 편의성 제고  
※ 각종상담 : 54,773건('20.) → 58,967건('21.) → 47,971건('22.) → 33,124('23.9.)  
※ 서류접수 : 4,626건('20.) → 4,612건('21.) → 3,808건('22.) → 2,797건('23.9.)

## 2. 소통 · 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국민생각함 참여도('22.11.~'23.9.) : 안건수 5,964건, 참여자수 658,537명
- 제도개선 권고('22.11.~'23.9.) : 34건 (부패방지 9건, 고충해소 25건)

### □ 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추진
  - ※ (주요사례)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23.4.),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23.5.) 등
- 권익위 또는 부처와 협업하여 사회적 이슈 및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국민의 정책 수용도 제고
  - ※ (주요사례)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 부담완화(법제처 협업, '23.3.), 음주 운전 방지대책('23.5.),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23.6.) 등

###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 주·월간 민원추이, 기관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동향 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대국민 공개\* (매주·매월)
  - \* 1,774개 공공기관·시민단체 제공,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등에 공개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국정현안 관련 기획분석을 통해 국민 피해·불편 적시 대응 및 정책시사점 도출
  - ※ 유기동물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제안('23.2.) 반지하 민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23.2.), 예비군 훈련 민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23.7.), 난임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제안('23.8.)

### □ 구조적 부패요인과 국민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9건, '22.11.~'23.9.)
  - ※ (주요 사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23.2.), 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23.8.) 등
  - ※ (국정과제)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추진중)
- (고충해소)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주거·취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25건, '22.11.~'23.9.)
  - ※ (주요 사례)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23.7.),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불편부담 요인 개선('23.1.),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23.7.) 등

### 3. 부패방지 정책 지속 추진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 개선

- 국가청렴도(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 ('20) 61점, 33위 → ('21) 62점, 32위 → ('22) 63점, 31위

#### □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공정채용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23.1월)하고, 신고사건 처리 및 부패현안 대응\*,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등 추진
  -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등 조치('23.6~8월)
-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요 해석 기준 배포, 유권해석 대응, 법 위반신고 조사·처리, 교육·홍보 등 적극 추진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해석 기준 배포('23.8), 기관 직접교육(504개 기관 '23.9), 권역별 설명회(1,030여개 기관 '23.8~9월), 슬로건 공모 등을 통한 홍보('23.5) 등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3.8.30.)을 통해 선물가액\*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15만원, 명절 기간 중 20→30만원)
  - \*\*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공연관람권 등의 물품·용역상품권 포함(금액상품권 제외)
- 제·개정 법령안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 \* (제·개정 법령안) 1,128개 법령안을 평가해 57개 법령에서 104건 개선권고('23.1~9.) (자치법규) 79개 시·군·구 1,974건, 17개 광역시·도 436건 개선권고('22.7~'23.7) (공공기관 사규) 220개 기타공공기관의 21,328개 사규 전수점검, 2,250건 개선권고('22년)

####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부패·공익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
  -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신고('23.7~10월),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 전관유착 신고('23.8~10월)
- 부패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 조사 실시, 필요시 소관기관에 재발방지 방안 및 감독 강화 조치요구
  - ※ (주요 사례)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부정사용을 적발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권고('23.8.)

## 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제도 운영

- 부패신고 : 총 6,464건 접수, 6,125건 처리, 보·포상금 약 35억원('22.11.~'23.9.)
- 공익신고 : 총 2,865건 접수, 2,977건 처리, 보·포상금 약 21억원('22.11.~'23.9.)

### □ 제도적 기반 확충·보완 등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포상대상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23.3.21.)

\*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 등 → (개정)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익신고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장이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금 제도 정비

※ 「부패방지권익위법」('22.1.4.) → 「공익신고자 보호법」('23.3.21.) 개정

-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3.3.21.)

###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이행실태점검 및 취약분야 점검 강화

- 중앙행정기관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현황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 실시

< 환수 등 제재현황 >

(단위: 건/백만원)

| 구 분 | '20년               |             | '21년                |                | '22년                 |                   |
|-----|--------------------|-------------|---------------------|----------------|----------------------|-------------------|
|     | 환수                 | 제재부가금       | 환수                  | 제재부가금          | 환수                   | 제재부가금             |
|     | 금액(건수)             | 금액(건수)      | 금액(건수)              | 금액(건수)         | 금액(건수)               | 금액(건수)            |
| 합 계 | 45,424<br>(52,995) | 264<br>(45) | 95,743<br>(133,928) | 9,855<br>(708) | 114,988<br>(303,471) | 18,610<br>(1,189) |

※ 각급기관의 제재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권고('23.11월 예정)

- 부정청구 빈발분야, 유사사례 발생 가능 분야 등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요 사례)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분야 부정수급에 대해 203개 지자체에 101억원 규모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권고('23.2.)

## 2 주요 정책 추진계획

비전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

목표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

**국민체감  
제도개선·규제혁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핵심  
추진  
과제

**1**

**현장중심의 민생구축·사회갈등 적극 해결**

**2**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

**3**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4**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5**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 1 현장중심의 민생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 ◆ 국민고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결하고, 빈발 민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

### □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 강화

- (현장형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고충해소 및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해결 기능 강화(연 104회)  
※ 고충민원 상담·접수, 지역현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청취 및 해소방안 등 논의
- (기업 애로 적극 해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 지역·업종 등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활성화(연 12회)  
\* 국가산단 경영현장,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안허가, 고용, 판로, 자금 등 맞춤형 고충해소
- (집단고충민원 해결)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집단고충 민원(100인 이상)의 경우 적극적 현장조정 등으로 신속히 갈등 해소\*  
※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단민원 해결 전담조직 '집단고충조사팀' 설치('23.3.20.)  
\* 장기 미해결 사안에 대한 현장확인, 기관간 조율 강화 등으로 사회갈등 확산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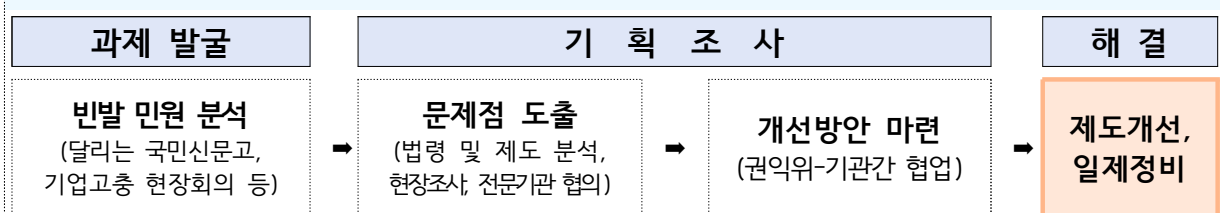
### □ 빈발되는 민원은 「기획조사」로 국민고충 근원적 해결

- 빈발민원 또는 전국적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법·제도적 미흡 요인 개선 및 현장 문제를 구체적 해결  
- 주거, 환경, 안전, 교육 등 민생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해결

####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과제】

- |                               |                                  |
|-------------------------------|----------------------------------|
| ✓ (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표시 정비 | ✓ (환경) 주민 축사악취를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
| ✓ (생활불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갈등 해소  | ✓ (취약계층)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

####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체계】





## 2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

◆ 민원·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 □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정책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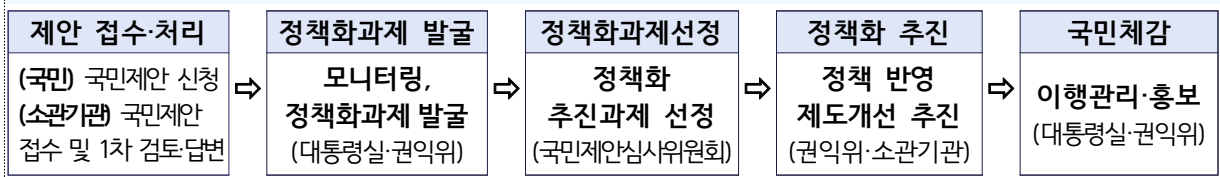
- (정책화 과제발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국민 제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책화 가능 과제\* 적극 발굴

\* 국민 불편 사항 개선, 행정제도·운영 등의 개선 제안

- (정책화 지원) 국민제안과 민원빅데이터의 연계·통합 분석 및 국민생각함 안전 상정을 통해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국민체감 제고\*

\* 우수제안 및 정책화 사례에 대한 분기별 대국민 발표 및 적극 이행 관리

#### 【국민제안 검토·처리 흐름도】



※ 민원·청원 처리절차 개선, 데이터 융합분석 도입 등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추진(~'24.3월)

### □ 국민중심의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 (국민참여 활성화)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확대(1,116개→1,162개)하고, 국민 생각 정책모니터단\*을 신규로 운영하여 우수안전 발굴·정책화 추진

\* 국민이 등록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우수안전 발굴 및 의제를 숙성·발전

- (데이터 개방) 행정기관만 공유했던 민원데이터 분석정보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누리집에 개방 확대('23.19종 → 2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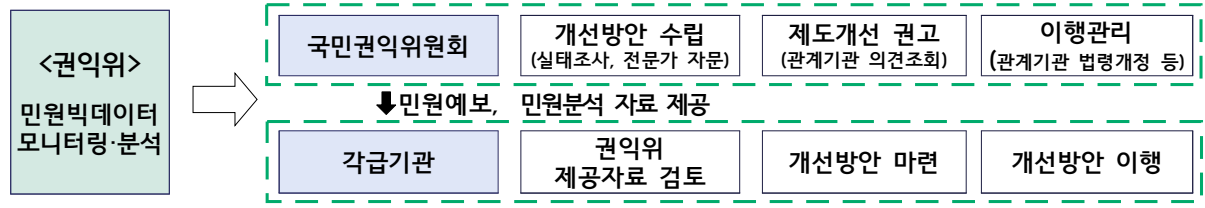
\* 빅데이터 누리집 개선을 위한 국민·기관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개선 지속추진

### □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국민신문고·새울(지자체) 등에 축적되는 1,300만건('22년)의 민원·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삶 개선에 활용

\* 현안별로 민원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련 통계,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관계기관 제공

### 【민원분석의 정책연계 흐름도】



- ▶ (기획분석) 국정과제의 주요정책이 국민생활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민원분석을 통해 발굴·보완·발전 방안 제시

※ 주요 국정현안(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 청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실시

### 【국정현안 관련 민원분석 주제(안)】

- ✓ (수능모의고사) 재학생에게는 수능모의고사 응시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반면,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응시료를 부담(1만2천원)하게 하여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 모색 필요
- ✓ (청년) 청년 주거 및 취업지원제도 관련 불편 및 불공정 사례를 통한 정책개선사항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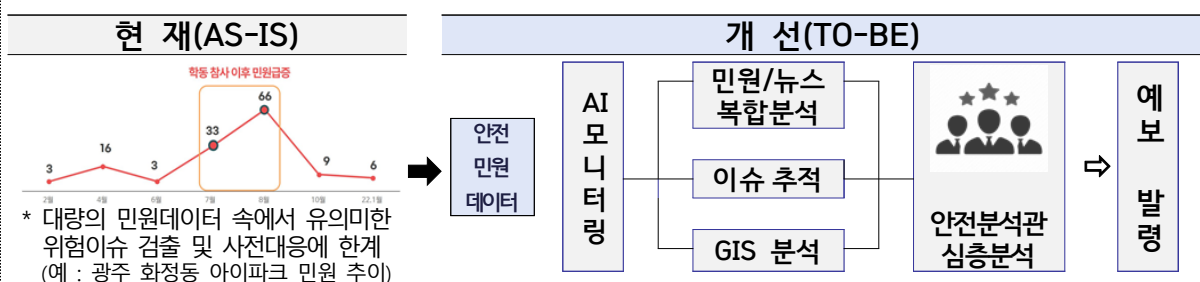
- ▶ (제도개선) 불합리한 법령·제도, 관행 등을 발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부패와 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

### 【분야별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              |                  |                                                                    |
|--------------|------------------|--------------------------------------------------------------------|
| 부패방지<br>제도개선 | 공직사회<br>투명성 제고   | ·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운영 방안<br>·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
|              | 교육연구 분야<br>투명성제고 | · 대학발전기금 운영 관리 투명성 제고<br>·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등 권익보호 방안(완료, '23.5.) |
| 고충해소<br>제도개선 | 불합리한<br>국민부담 해소  | ·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br>·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불편부담 요인 개선(완료, '23.1.) |
|              | 취약계층<br>보호 강화    | · 가정위탁아동 법적양육보호장치 강화<br>· 저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

- ▶ (민원예보)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 등 관련 정보와 융·복합 분석으로 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예보 발령

### 【민원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보 시스템 체계도】



※ 일시적 급증 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키워드(붕괴, 사고, 폭발 등)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도출한 후 분석관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조치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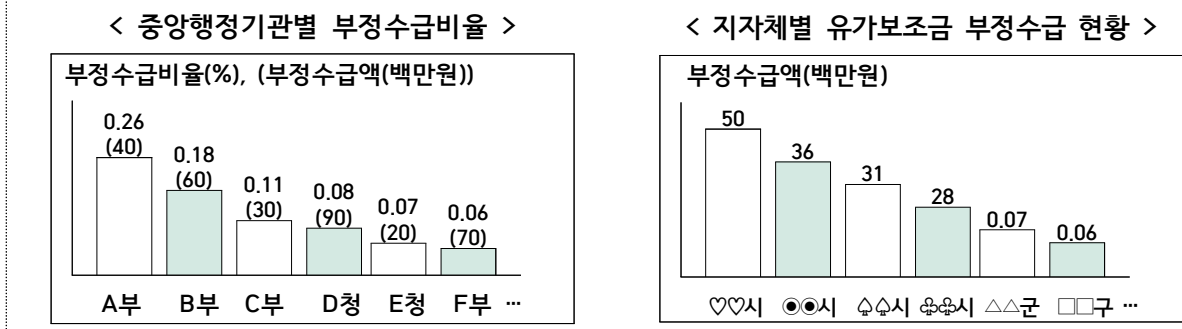
### 3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 ◆ 나랏돈의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 기반 마련

#### □ 보조금 등 부정사용 근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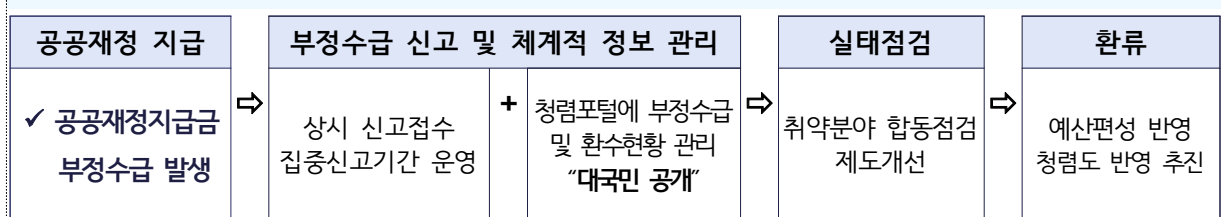
- 민간,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 ▶ 집중신고기간(23.7.11.~10.10, 3개월간) 운영을 통해 민생분야 및 민간단체·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단체·협회 등 포함)를 적극 발굴
- ▶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 및 비율, 환수액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연2회→상시입력)하고 대국민 공개

#### 【공공재정 부정수급·환수내역 정보 대국민 공개화면(예시)】



- ▶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 (예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투자사업 등
- ▶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노력'을 청렴도평가에 반영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 □ 청렴 정책의 내실있는 운영 및 청렴문화 확산

- **(공공기관 청렴역량 강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확대\*, 결과 발표 시기 단축\*\* 등 공공기관 청렴수준의 정확한 진단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 기초 시의회에 대한 평가 실시 등 전년 대비 10.5% 확대 : ('22) 569개 → ('23) 629개
  - \*\* 평가 결과의 적기 활용 지원을 위해 약 1개월 단축 : ('22) 차년도 1월 → ('23) 당해연도 12월
- **(공직자 행위규범 운영)** 기관별 반부패 제도 운영 실태 점검\* 및 교육 지원\*\*,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하여 행위규범의 공직사회 내재화 도모
  - \*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점검(~12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적절 처리 기관 등에 대한 시정 조치(~9월), 행동강령 위반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12월)
  - \*\*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저조기관 특별교육 실시, 소규모 기관 등 맞춤형 교육 지원(11월)
- **(부패영향평가)** 국정과제·민생 관련 법령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전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단계적 전수 평가\* 실시(~'24.)
  - \* ('22년) 79개 시·군·구, ('23년) 78개 광역·자치구, ('24년) 86개 시·군·구 순차 평가 실시
- **(청렴윤리경영 확산)** 공기업·민간기업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교육·컨설팅 실시
  - \* '23년 하반기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및 민간기업용 가이드라인 배포 추진

## □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체계 일원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여 국민 혼란 예방
  -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 이행강제금, 위반자 제재수준 등 통일
- **(신고자 지원 강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4~20%)을 4~30% 확대하고,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 추진
  - \* 보상금 =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 × 보상금 지급비율 × 감액사유 고려
-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 사전 검토회의 정례화 등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 \* 22년 보호사건 244건 처리, 110.4일 소요(신분보장 보호사건 137건, 127.3일 소요)

#### 4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도약의 기회 보장

#####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전수조사 실시) 全 공직유관단체의 '22년 채용과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추진
- ※ 전수조사 실시('23.2~10월), 감독기관별 조사결과 취합·분석 및 결과 발표('23.12월)
- (신고사건 처리) 위원회에서 접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의 적극적 처리를 통한 채용비리 근절 추진
- ※ ('23.1월~9월) 접수 107건 / 이첩 8건, 송부 26건, 종결 56건, 조사진행중 17건
- (관리 사각지대 해소)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제도개선 권고('23.3.15.) 관련 이행점검 실시('23.10~12월)
- ※ ('24년~) '공정채용 기준' 준수 여부 주기적 점검 추진
- (채용규정 일괄 정비) 공직유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의 적정성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 권고하는 등으로 불공정 채용 사전 예방
- ※ 3년('23~'25년)간 약 1,300여개 공직유관단체 규정의 '공정채용 법령·지침' 위반 및 누락 여부를 진단·점검하고, 개정 유도(350개<sup>'23년</sup> → 500개<sup>'24년</sup> → 541개<sup>'25년</sup>)
-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공정채용 전문교육 과정(대면·사이버) 운영을 통해 채용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채용비리 사전 예방
- ※ (대면) 월 1회 정기 실시, (사이버)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내 신설('23.7월~)

#####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전문자격시험(세무사 등 15종)의 자격자동부여·시험과목면제 등 과도한 공직경력특례 제도개선
- ※ 청년층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2년→5년) 확대 별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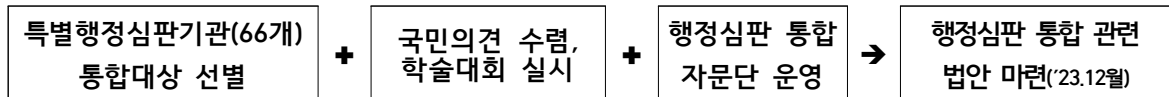
## 5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 (기관 통합)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
  - ※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처분기관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심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단계】



\* 국정과제 13-4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설치·운영중('23.6월~)

- (시스템 통합)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부터 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행정심판시스템 구축('24년 119개 기관\* 통합 목표)
  - \* 일반행정심판 57개, 특별행정심판 66개 총 123개 기관 중 1심법원 역할을 하는 3개 기관과 다국어지원이 필요한 난민위를 제외한 119개 기관

### □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폭 확대

- (권익구제 역할 강화)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위 등 구체적 부당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당성 판단을 확대하고, 변경재결\*을 활성화
  - \* (예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시 영업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 큰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
-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심판청구 전부터 선제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 신청자격 확대(행정심판법 개정) : (현행) 청구인 → (개선) 청구하려는 자, 참가인, 참가하려는 자
- (EASY 행정심판) 국민들이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의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심판청구의 편의성을 제고
  - \* ('22년) 중앙행정심판위 → ('23년) 시·도, 시·도교육청, 검찰청 등 51개 행심위로 확대

## Ⅳ.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연번 | 시정·처리요구사항                                                                                             |
|----|-------------------------------------------------------------------------------------------------------|
| 1  |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2  |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감면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3  |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 4  | 공공기관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5  | ‘국공립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6  | 권익위의 청렴도·부패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권익위의 자체 종합청렴도 측정방식을 개발할 것                                   |
| 7  |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내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등 실태조사·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 8  | 실태조사를 통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                                |
| 9  | 공익신고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선 보호 후 검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 10 |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점검, 보호 부서 인력 증원 등 신고자 보호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것                     |
| 11 |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급히 개선하고, 국민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일반사건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 12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논문 대필 갑질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자를 고발할 것        |
| 13 | 정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14 |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23년도에 계획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보고할 것                                         |
| 15 | 고충민원 처분 결정 과정에서 상부 또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결정 수위에 영향을 준 사건이 없는지 전수조사 하고, 적발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1.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p>○ 권익위는 기관별 교육 실적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및 교육지원 방안 마련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22년) 부패방지권익위법(1.4.) 및 같은 법 시행령(7.19.) 개정을 통해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저조 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교육 이행계획서 징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p> <p>※ (조치사항) 실적 부진기관 대상 특별교육실시(총 4회),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 이행계획서 징구</p> <p>- ('23년)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부패방지교육 설명회(총 2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용성 제고</p> <p>○ 향후에도 관리자 특별교육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기관 등 자체교육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2.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감면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sup>이정무위 계류 중임</sup></p> <p>* 현행 30억 원<br/>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발의('21.3.30.), 법안2소위 대안 의결('23.6.29.)</p> <p>○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 책임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sup>**이정무위 계류 중임</sup></p> <p>* ① 조사·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고, ② 신고자가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br/>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의안('21.3.30.) 및 같은 당 이용우 의원 발의안('22.11.18.)<br/> → 법안 제2소위원회 심사 중</p> <p>○ 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3. 공공재정 부정수급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p>○ 현재,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관리를 위해, 청렴포털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21.3월) 중임</p> <p>– 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등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및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4. 공공기관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함('22.12월)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5. ‘국공립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p>○ 교육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여부와 조치기한 준수 여부를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 청렴노력도 지표 반영</p> <p>※ 이행 사항: 대학교원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 심사위원 구성 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p> <p>○ 교육부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시 미이행 부분* 계속 평가 예정</p> <p>* 심사단계별 최소 심사위원 수를 법령에 규정</p> <p>○ 교육부가 '23. 4. 11.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으로써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p> <p>–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고,</p> <p>– 이해충돌 시 스스로 회피할 의무와 기피신청 규정</p> <p>○ 교육부와 국공립대학 대상으로 이행 현황을 조사('23.3~)하여 권고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p>6. 권익위의 청렴도·부패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권익위의 자체 종합청렴도 측정 방식을 개발할 것</p> | <p>○ 권익위와 국조실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권익위 실정에 맞는 자체 청렴수준 측정방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22.10.14.)</p> <p>- 타 공공기관과 같은 분야(체감도+노력도-부패실태)를 측정하되, 권익위 실정에 맞게 일부 측정지표를 보완하여, 상대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p> <p>○ 청렴체감도 측정을 위한 외부 전문조사기관 선정을 완료하였고, 12월 말까지 측정을 완료할 예정</p> <p>○ 청렴수준 측정 결과는 자체 청렴·반부패 추진 업무에 활용할 예정</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7.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내 행동강령 표준안 반영 등 실태 조사·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p>○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p> <p>- (제개정 현황 점검) '22년 1,376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제개정 현황을 전수 점검하였으며, 행동강령 미제정 기관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갑질 금지규정 미신설, 이해충돌방지규정 미삭제 등 행동강령 표준안 대비 미비점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조치하였음('23.1~4)</p> <p>- (신규 기관 이행실태 점검) 행동강령 제도 도입 3년이 경과한 '19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현황 등 운영실태를 점검('23.8월~)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기관들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할 예정임</p> <p>○ 향후, 공직유관단체 기관별 행동강령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설명회, 이행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8. 실태조사를 통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 | <p>○ 법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22.8~12월) 하였으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개정 등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p> <p>- 또한, 법 시행 이후 유권해석 질의·답변, 법 위반신고 조사·처리 등 제도운영을 통해 파악한 빈발질의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립하였고,</p> <p>- 권역별 설명회, 각급 기관 대상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p> <p>○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9. 공익신고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선 보호 후 검토’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p>○ 신속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先보호·後검토 체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 중임</p> <p>*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발의('21.3.10.), 법안 제2소위 심사 중</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lt; 법안 주요 내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이후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위원회 최종 결정 시까지 일단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신청 후 위원회 결정까지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li> <li>•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li> </ul> </div> <p>○ 권익위는 상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p>10.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점검, 보호 부서 인력 증원 등 신고자 보호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것</p> | <p>○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기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p> <p>* ①장기미처리 사건 전담팀 운영, ②보호 사건 유형별 전담조사관 지정, ③조사관 협업체계 운영 등</p> <p>- '23년 3월 행정안전부에 인력증원을 요구하여,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확정 및 '24년 인건비 예산 반영('23.8.19.)</p> <p>- 보호 조사관 증원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및 정원 조정 진행 중임</p> <p>○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이행 상황 및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 중</p> <p>○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신속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p>11.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행정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급히 개선하고, 국민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일반사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도 국선 대리인 선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미결 사건 점검회의 개최, 개인별 실적관리 등 장기미결사건 관리 강화 및 조사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멘토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약 187일에 달하던 보훈사건 평균재결 기간이 '23.9 기준 105일로 대폭 감소</li> </ul> </li> <li>○ 매주 미결사건 점검회의 개최, 개인별 실적관리 등 장기미결사건 관리 지속 실시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사건의 난이도에 맞는 담당 조사관 배정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li> </ul> </li> <li>○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35%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임을 지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현재는 행정심판 청구 후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는 데 한계 존재</li> </ul> </li> <li>○ 경제적 약자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부터 법률전문가가 조력하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청구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중(정경희 의원, '23.4.~)</li> </ul> </li> </ul>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p>12.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논문 대필 갑질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위법행위 이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자를 고발할 것</p> | <p>○ 감사원은 위원회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22. 8.~)를 진행하면서 관련자에게 탄원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 탄원서 제출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p> <p>- 감사보고서에는 갑질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권자인 권익위원장이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기관주의)</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13. 정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p>○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총괄기관으로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p> <p>○ 앞으로도 권익위는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p>14.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23년도에 계획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보고할 것</p> | <p>○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고충민원 또는 공익신고 등이 접수되는 경우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음</p> <p>* 권익위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신고(2건)는 권익위 분과위 심의('19.7.) 후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종결되었으며, 작년 국정감사 이후 추가적인 공익신고는 없음</p> <p>&lt;참고&gt;</p> <p>○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에 대해 대통령·국회·국무총리·환경부 등 11개 기관에 공식사과 및 공소시효 연장 등에 대하여 총 26개 사항을 권고('22. 9. 1.) 하였고, 각 권고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이행·관리하고 있는 상황임</p> <p>* '22. 9. 10. 사회적참사특조위 활동 종료</p> |

| 구분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국민권익위원회 | <p>15. 고충민원 처분 결정 과정에서 상부 또는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 결정 수위에 영향을 준 사건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적발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p> | <p>○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p> <p>○ 외압 등으로 고충민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음</p> |

## V. 2023년 감사원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감사기간                                              | 감사 종류      | 지적사항                                                                                                                                                                                                                                                                                                                                                                                       | 시정조치 결과                                                                                                                     |
|---------------------------------------------------|------------|--------------------------------------------------------------------------------------------------------------------------------------------------------------------------------------------------------------------------------------------------------------------------------------------------------------------------------------------------------------------------------------------|-----------------------------------------------------------------------------------------------------------------------------|
| '22.8.1.-<br>9.29.<br>(감사결과<br>처분요구:<br>'23.6.9.) | 특정사안<br>감사 | <p>1. 갑질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 제출 등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p> <p>2.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제출로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조치사항 없음)</p> <p>2-1. 허위 참석확인서 제출 등 신고 사건 조사업무 방해 관련자에게 <b>주의</b> 촉구(3명)</p> <p>2-2. 신고사건 조사 업무 방해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자 <b>징계</b>(해임)</p> <p>3.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 담당자에게 <b>주의</b> 촉구</p> <p>4. 고충민원 의견표명과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확한 사실 기재 및 사실관계와 판단근거 등 면밀 검토하도록 <b>주의</b></p> | <p>1. 재심의 청구</p> <p>2-1. 재심의 청구<br/>※ 재심의 청구자 2명을 제외한 1명에게는 주의장 발부</p> <p>2-2. 재심의 청구</p> <p>3. 주의장 발부</p> <p>4. 재심의 청구</p> |

## 2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감사기간                     | 대상 부서 | 지적사항                                     | 시정조치 결과 |
|--------------------------|-------|------------------------------------------|---------|
| '23.2.15-3.15.           | 기획조정실 | 1. 시정 3건                                 | ○ 조치 완료 |
|                          |       | - 퇴직자 및 전출자의 온나라 문서시스템 계정 회수             |         |
|                          |       | -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액 환수                       |         |
|                          |       | -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액 환수                        |         |
|                          |       | 2. 주의 3건                                 | ○ 조치 완료 |
|                          |       | -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유의                  |         |
|                          |       | - 특근매식비 집행 철회                            |         |
|                          |       | - 출장여비 정산 철회                             |         |
|                          |       | 3. 권고 1건                                 | ○ 조치 완료 |
|                          |       | -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
|                          |       | 4. 통보 3건                                 | ○ 조치 완료 |
|                          |       | - 온나라 문서시스템 계정 부여 적정성에 관한 내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 - 자료전송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         |
| - 임차료 지급시 견적서 등 증빙 징구 철회 |       |                                          |         |

## VI. 소속기관 운영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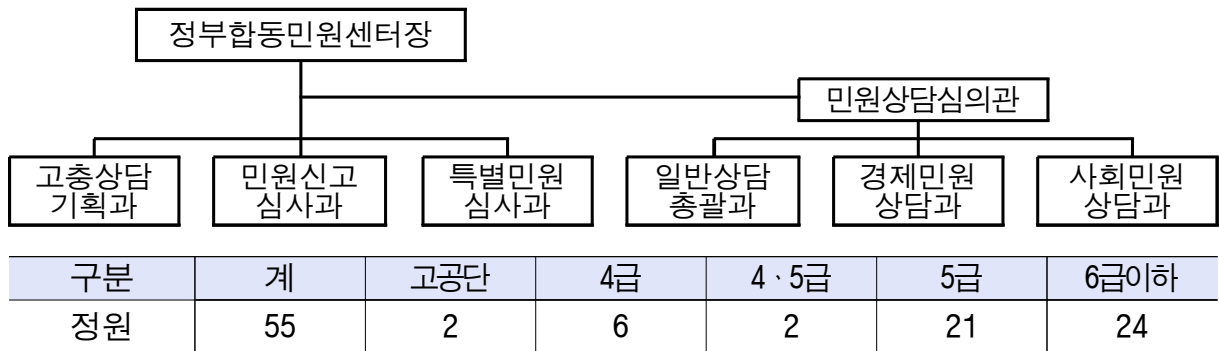
### 1 정부합동민원센터

#### □ 기능

- 민원·행정심판의 안내, 상담접수 및 화상상담시스템 관리
- 110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부패·공익 신고 등 상담·접수·분류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분류·사후관리 및 현황 분석·보고
- 온라인 민원 상담시스템 운영
- 다수기관 관련 민원 안내·상담 및 관계기관 간 협의

#### □ 조직

- 6과, 정원 55명



#### □ 예산

- 115억 4천 7백만원(종합상담창구운영)

※ 국민콜110 운영 111억 3천 3백만원,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2억 1천 4백만원

#### □ 상담·접수 실적

(단위 : 건수, '23.1~9월)

| 구 분  | 민원(방문) | 부패신고  | 행정심판 | 온라인    | 국민콜110    | 대비실서신  |
|------|--------|-------|------|--------|-----------|--------|
| 각종상담 | 2,423  | 9,871 | 91   | 20,739 | 1,982,291 | -      |
| 민원접수 | 2,350  | 115   | 332  | -      | -         | 15,0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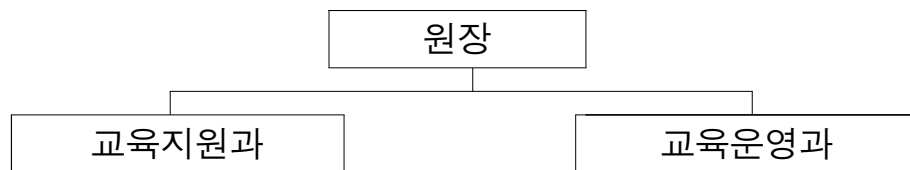
## 2 청렴연수원

### □ 기능

- 반부패·청렴교육 기획 및 운영
- 반부패·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대국민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기획·운영
- 외국공무원 청렴연수 및 반부패 정보교류(ODA)

### □ 조직

- 2과, 정원 25명



| 구분 | 계  | 고공단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이하 | 전문<br>경력관 | 시간<br>선택제 |
|----|----|-----|------|----|------|----|-------|-----------|-----------|
| 정원 | 25 | -   | 1    | -  | 2    | 2  | 18    | 1         | 1         |

### □ 예산

- 23억 1,200만원(청렴교육및의식확산, 반부패기술지원)

### □ 주요 실적

- 집합교육 : 총 242회, 48,878명 수료('23.9월말 기준)

| 구분   | 합계     | 공직자 대상 |        | 일반 국민 대상 |
|------|--------|--------|--------|----------|
|      |        | 원내 집합  | 기관 방문  |          |
| 횟수   | 242    | 85     | 115    | 42       |
| 수료인원 | 48,878 | 8,669  | 35,454 | 4,755    |

- 이러닝교육 : 총 244회, 212,281명 수료('23.9월말 기준)



## Ⅶ. 각종 민원·신고 처리 현황

### 1 부패방지

####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건수 | 45,142 | 7,328 | 9,435 | 6,103 | 9,690 | 7,300 | 5,286  |

####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계            | 45,021 | 7,224 | 8,718 | 6,355 | 10,176 | 7,489 | 5,059  |
| 이첩           | 1,396  | 306   | 415   | 446   | 128    | 41    | 60     |
| 행동강령<br>위반통보 | 937    | 78    | 190   | 252   | 361    | 26    | 30     |
| 기관송부         | 5,525  | 377   | 369   | 846   | 2,152  | 1,093 | 688    |
| 종결           | 37,163 | 6,463 | 7,744 | 4,811 | 7,535  | 6,329 | 4,281  |

####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보호  | 582(109)      | 38(5)    | 106(23)  | 107(36)    | 126(18)    | 107(20)    | 98(7)      |
| 보상  | 10,471(2,028) | 210(166) | 948(196) | 1,558(237) | 1,773(485) | 2,796(477) | 3,186(467) |
| 포상  | 34(34)        | 9(9)     | 6(6)     | 2(2)       | 6(6)       | 7(7)       | 4(4)       |
| 구조금 | 28(5)         | -        | -        | -          | 8(-)       | 12(3)      | 8(2)       |

\* ( )는 인용건수

\*\* 부패신고 구조금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 시행일(2020.10.17.) 이후 신고건으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

## □ 공익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건수 | 24,720 | 3,923 | 5,164 | 5,546 | 4,531 | 3,266 | 2,290  |

## □ 공익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계    | 25,084 | 3,952 | 5,165 | 5,563 | 4,782 | 3,262 | 2,360  |
| 이첩   | 2,187  | 37    | 388   | 629   | 432   | 483   | 218    |
| 기관송부 | 9,421  | 943   | 2,187 | 2,975 | 1,621 | 1,069 | 626    |
| 종결   | 13,476 | 2,972 | 2,590 | 1,959 | 2,729 | 1,710 | 1,516  |

##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보호  | 741(173)     | 53(20)   | 131(43)  | 125(40)  | 126(27)  | 137(27) | 169(16) |
| 보상  | 2,246(1,007) | 698(277) | 364(211) | 436(249) | 297(138) | 269(99) | 182(33) |
| 포상  | 72(72)       | 7(7)     | 29(29)   | 12(12)   | 7(7)     | 15(15)  | 2(2)    |
| 구조금 | 145(27)      | 10(7)    | 19(5)    | 17(1)    | 55(7)    | 27(4)   | 17(3)   |

\* ( )는 인용건수

##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      | 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9 |
|----|------|-------|-------|------|------|------|--------|
| 접수 |      | 2,604 | 1,202 | 668  | 342  | 173  | 219    |
| 처리 | 계    | 2,933 | 1,349 | 779  | 435  | 182  | 188    |
|    | 이첩   | 255   | 136   | 74   | 23   | 10   | 12     |
|    | 기관송부 | 953   | 347   | 244  | 185  | 89   | 88     |
|    | 종결   | 1,725 | 866   | 461  | 227  | 83   | 88     |

## 2 고충처리

###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     | 접수      | 처리      | 고 충 민 원          |                  |                    |           |       |        |        | 기타민원      |
|--------|---------|---------|------------------|------------------|--------------------|-----------|-------|--------|--------|-----------|
|        |         |         | 시정<br>권고         | 의견<br>표명         | 조정<br>합의           | 안내·<br>기각 | 각하    | 이송     | 종결     | 종결·<br>취하 |
| 합계     | 262,225 | 259,280 | 1,645<br>(1,381) | 2,404<br>(1,974) | 25,695<br>(10,397) | 60,848    | 8,182 | 32,490 | 40,244 | 87,772    |
| 2018   | 30,712  | 29,609  | 230<br>(210)     | 322<br>(238)     | 2,516<br>(1,965)   | 1,598     | 636   | 300    | 7,299  | 16,708    |
| 2019   | 56,189  | 57,624  | 407<br>(319)     | 382<br>(318)     | 11,184<br>(1,818)  | 14,224    | 1,104 | 1,840  | 5,521  | 22,962    |
| 2020   | 49,390  | 45,657  | 326<br>(292)     | 513<br>(434)     | 2,272<br>(1,519)   | 10,844    | 1,515 | 8,114  | 5,501  | 16,572    |
| 2021   | 56,423  | 58,880  | 220<br>(191)     | 430<br>(367)     | 3,373<br>(1,562)   | 22,745    | 1,120 | 16,251 | 3,099  | 11,642    |
| 2022   | 37,569  | 37,598  | 287<br>(224)     | 473<br>(368)     | 3,250<br>(1,830)   | 6,620     | 3,126 | 4,951  | 7,898  | 10,993    |
| 2023.9 | 31,942  | 29,912  | 175<br>(145)     | 284<br>(249)     | 3,100<br>(1,703)   | 4,817     | 681   | 1,034  | 10,926 | 8,895     |

※ 괄호()는 유사·반복민원을 병합한 수치임

### □ 집단민원(5인 이상)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접 수 | 처 리 (인 용) |     |      |      |     |
|--------|-----|-----------|-----|------|------|-----|
|        |     | 조 정       | 합 의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합 계 |
| 2018   | 229 | 65        | 39  | 5    | 6    | 115 |
| 2019   | 266 | 47        | 22  | 8    | 9    | 86  |
| 2020   | 299 | 53        | 35  | 11   | 14   | 113 |
| 2021   | 310 | 41        | 57  | 8    | 10   | 116 |
| 2022   | 317 | 33        | 169 | 15   | 30   | 247 |
| 2023.9 | 283 | 45        | 81  | 11   | 28   | 165 |

###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황

(단위 : 건)

| 구 분  |    | 실시횟수 | 상 담 실 적 |        |      |       |
|------|----|------|---------|--------|------|-------|
|      |    |      | 현장해결    | 고충민원접수 | 상담안내 | 계     |
| 2022 |    | 104  | 1,075   | 299    | 555  | 1,929 |
| 2023 | 1월 | 5    | 57      | 13     | 40   | 110   |
|      | 2월 | 8    | 84      | 33     | 24   | 141   |
|      | 3월 | 10   | 105     | 29     | 62   | 196   |
|      | 4월 | 10   | 242     | 39     | 81   | 362   |
|      | 5월 | 8    | 75      | 31     | 50   | 156   |
|      | 6월 | 17   | 162     | 60     | 66   | 288   |
|      | 7월 | 7    | 110     | 23     | 50   | 183   |
|      | 8월 | 2    | 42      | 13     | 29   | 84    |
|      | 9월 | 13   | 181     | 48     | 72   | 301   |
|      | 계  | 80   | 1,058   | 289    | 474  | 1,821 |

### 3 행정심판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구분 | 접수     | 심리·의결  |       |        |       | 인용률(%) |      |      | 취하<br>·<br>이송 |
|--------|----|--------|--------|-------|--------|-------|--------|------|------|---------------|
|        |    |        | 계      | 인용    | 기각     | 각하    | 전체     | 운전   | 운전제외 |               |
| 2018   |    | 23,043 | 25,153 | 3,814 | 18,928 | 2,411 | 16.8   | 17.3 | 14.4 | 1,401         |
| 2019   |    | 24,076 | 21,534 | 1,567 | 14,166 | 5,801 | 10.0   | 9.7  | 10.9 | 1,271         |
| 2020   |    | 22,367 | 22,727 | 1,573 | 16,783 | 4,371 | 8.6    | 7.7  | 11.6 | 1,094         |
| 2021   |    | 19,229 | 18,873 | 1,710 | 14,892 | 2,271 | 10.3   | 7.9  | 16.6 | 1,140         |
| 2022   |    | 21,467 | 21,159 | 1,468 | 15,581 | 4,110 | 8.6    | 5.7  | 16.5 | 1,527         |
| 2023.9 |    | 23,816 | 22,662 | 898   | 12,201 | 9,563 | 6.9    | 5.0  | 11.1 | 1,279         |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구분 | 일반사건(의료포함)       |        |               |       |       | 보훈사건           |       |               |       |    | 운전면허사건           |        |                 |        |     |
|--------|----|------------------|--------|---------------|-------|-------|----------------|-------|---------------|-------|----|------------------|--------|-----------------|--------|-----|
|        |    | 접수               | 심리·의결  |               |       |       | 접수             | 심리·의결 |               |       |    | 접수               | 심리·의결  |                 |        |     |
|        |    |                  | 소계     | 인용            | 기각    | 각하    |                | 소계    | 인용            | 기각    | 각하 |                  | 소계     | 인용              | 기각     | 각하  |
| 2018   |    | 4,912<br>(21.3)  | 5,251  | 596<br>(19.1) | 2,530 | 2,125 | 1,304<br>(5.7) | 1,442 | 53<br>(3.9)   | 1,317 | 72 | 16,827<br>(73.0) | 18,460 | 3,165<br>(17.3) | 15,081 | 214 |
| 2019   |    | 9,258<br>(38.4)  | 7,607  | 297<br>(14.7) | 1,722 | 5,588 | 1,292<br>(5.4) | 1,148 | 40<br>(3.7)   | 1,038 | 70 | 13,526<br>(56.2) | 12,779 | 1,230<br>(9.7)  | 11,406 | 143 |
| 2020   |    | 6,762<br>(30.2)  | 7,139  | 438<br>(14.3) | 2,627 | 4,074 | 1,328<br>(5.9) | 1,080 | 36<br>(3.6)   | 974   | 70 | 14,277<br>(63.8) | 14,508 | 1,099<br>(7.7)  | 13,182 | 227 |
| 2021   |    | 5,497<br>(28.6)  | 5,465  | 685<br>(19.7) | 2,795 | 1,985 | 1,134<br>(5.9) | 1,218 | 84<br>(7.3)   | 1,071 | 63 | 12,598<br>(65.5) | 12,190 | 941<br>(7.9)    | 11,026 | 223 |
| 2022   |    | 7,658<br>(35.7)  | 7,006  | 588<br>(18.3) | 2,617 | 3,801 | 1,197<br>(5.6) | 1,437 | 163<br>(12.0) | 1,196 | 78 | 12,614<br>(58.8) | 12,716 | 717<br>(5.7)    | 11,768 | 231 |
| 2023.9 |    | 13,825<br>(58.0) | 12,366 | 373<br>(12.1) | 2,699 | 9,294 | 873<br>(3.7)   | 949   | 66<br>(7.5)   | 813   | 70 | 9,118<br>(38.3)  | 9,347  | 459<br>(5.0)    | 8,689  | 199 |

## 4 국민소통

###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계<br>(월평균)                  | 신문고       | 부처<br>홈페이지 | 서신(BH) | 지자체 등<br>이송이첩 |
|--------|-----------------------------|-----------|------------|--------|---------------|
| 2018   | 4,735,392<br>(월 394,616)    | 2,742,615 | 1,864,975  | 34,194 | 93,608        |
| 2019   | 7,995,116<br>(월 666,259)    | 4,599,017 | 3,234,517  | 33,974 | 127,608       |
| 2020   | 9,570,011<br>(월 797,708)    | 6,494,339 | 2,902,774  | 25,037 | 147,861       |
| 2021   | 13,265,060<br>(월 1,105,422) | 9,438,994 | 3,743,984  | 22,806 | 59,276        |
| 2022   | 10,706,128<br>(월 892,177)   | 8,599,039 | 2,041,523  | 18,738 | 46,828        |
| 2023.9 | 9,134,017<br>(월 1,014,890)  | 7,472,074 | 1,605,273  | 15,262 | 41,408        |

### □ 국민신문고 제안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계 (월평균)            | 국민제안    | 공무원제안 |
|--------|--------------------|---------|-------|
| 2018   | 108,746 (월 9,062)  | 102,919 | 5,827 |
| 2019   | 111,049 (월 9,254)  | 105,962 | 5,087 |
| 2020   | 137,006 (월 11,417) | 129,963 | 7,043 |
| 2021   | 173,900 (월 14,492) | 168,563 | 5,337 |
| 2022   | 193,836 (월 16,153) | 189,960 | 3,876 |
| 2023.9 | 113,070 (월 12,564) | 109,806 | 3,264 |

### □ 국민콜110 운영 현황

(단위: 건, %)

| 연도      | 인입콜       | 응대콜       | 응대율  | 일평균 응대콜 |
|---------|-----------|-----------|------|---------|
| 2018    | 3,254,756 | 3,097,860 | 95.2 | 11,548  |
| 2019    | 3,139,917 | 2,928,671 | 93.3 | 10,911  |
| 2020    | 3,801,491 | 3,280,256 | 86.3 | 12,174  |
| 2021    | 3,097,391 | 2,851,423 | 92.1 | 10,560  |
| 2022    | 2,665,492 | 2,482,728 | 93.1 | 9,257   |
| 2023.9. | 1,982,291 | 1,855,109 | 93.6 | 9,230   |

## VIII.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 1 소관 시행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패방지 및<br>국민권익위원회의<br>설치와 운영에<br>관한 법률 시행령 | 2008. 2. 29.<br>제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 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2009. 5. 28.<br>일부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11. 4. 4.<br>일부개정  |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패방지 및<br>국민권익위원회의<br>설치와 운영에<br>관한 법률 시행령 | 2011. 10. 17.<br>일부개정 |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                                            | 2015. 10. 20.<br>일부개정 | 부패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기피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16. 9. 27.<br>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비위면직자 등의 해임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5호, 2016. 3. 29. 공포,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패방지 및<br>국민권익위원회의<br>설치와 운영에<br>관한 법률 시행령 | 2016. 9. 27.<br>일부개정  |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평가 결과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기간, 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교육의 방법·결과제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범위 및 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2018. 1. 30.<br>일부개정  |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 2019. 10. 15.<br>일부개정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4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조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20. 12. 22.<br>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등을 한 경우 이첩·재이첩 등을 받은 다른 조사기관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면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패방지 및<br>국민권익위원회의<br>설치와 운영에<br>관한 법률 시행령 | 2020. 12. 22.<br>일부개정 |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결과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및 신청인 등이 미리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22. 2. 18.<br>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하고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22. 7. 19.<br>일부개정  |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패방지 및<br>국민권익위원회의<br>설치와 운영에<br>관한 법률 시행령 | 2022. 7. 19.<br>일부개정 |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br>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br>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br>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br>점점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br>단체에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br>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br>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5호, 2022.<br>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br>사건의 이첩 절차,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br>절차, 부패방지교육 부실 기관·단체의 관리자에<br>대한 특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br>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패<br>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현행 '2억원'<br>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br>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23. 6. 13.<br>일부개정 | 부패행위 신고를 한 퇴직공직자가 보상금을 신청한<br>경우 재직 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br>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br>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br>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8호,<br>2023.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의<br>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가<br>그 감사·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br>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br>구조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br>구조금 지급 신청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br>한 경우만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br>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정청탁 및<br>금품등 수수의<br>금지에 관한<br>법률 시행령 | 2016. 9. 8.<br>제정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2018. 1. 17.<br>일부개정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조정                                                                                                                                                                                                                                                                                                                                                                                                                |
|                                       | 2020. 9. 10.<br>일부개정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20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                                       | 2021. 1. 19.<br>일부개정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부정청탁 및<br>금품등 수수의<br>금지에 관한<br>법률 시행령 | 2022. 1. 5.<br>일부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br>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br>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br>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br>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br>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br>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br>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br>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함                                                                                                                    |
|                                       | 2022. 6. 7.<br>일부개정  |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를<br>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br>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br>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br>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br>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76호,<br>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br>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을 조사<br>기관에 이첩·송부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br>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하지<br>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실명 대리신고<br>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br>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 2023. 8. 30.<br>일부개정 |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br>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br>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br>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br>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br>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br>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br>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br>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br>상향조정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공직자의<br>이해충돌<br>방지법 시행령 | 2021. 12. 31.<br>제정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 직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공익신고자<br>보호법 시행령        | 2011. 9. 30.<br>제정  |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보호조치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규정                                                                                                                                                                                                                                                                                     |
|                         | 2014. 4. 8.<br>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공익신고자<br>보호법 시행령 | 2014. 4. 8.<br>일부개정  | 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 접수,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14. 9. 2.<br>일부개정  | 공익신고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 신고자로 인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16. 1. 25.<br>일부개정 |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와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보호조치 결정 등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공익신고자<br>보호법 시행령 | 2016. 1. 25.<br>일부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2017. 10. 17.<br>일부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안내 신설                                                                                                                                                                                                                                                                                                                                                  |
|                  | 2018. 4. 30.<br>일부개정  |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며,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                                                                                                                                                                                                                                                                                                       |
|                  | 2018. 10 .16.<br>일부개정 |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대리신고되어 봉인·보관된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임 |
|                  | 2021. 10. 19.<br>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 기관 등에 송부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32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를 조사기관 등에 송부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함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공익신고자<br>보호법 시행령                                | 2023. 6. 13.<br>일부개정 |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신고를 한 퇴직공직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재직 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67호, 2023. 3. 21. 공포, 6. 22. 시행 및 9. 22.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지급기준을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로 변경하고, 공익신고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공익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 신청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만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공공재정<br>부정청구 금지<br>및 부정이익<br>환수 등에 관한<br>법률 시행령 | 2019. 12. 31.<br>제정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등의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23호, 2019. 4. 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지급금의 범위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공공채정<br>부정청구 금지<br>및 부정이익<br>환수 등에 관한<br>법률 시행령 |                       | 경우 부과하는 이자와 부정이익의 가액 산정 기준 등 부정이익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2023. 6. 13.<br>일부개정  | 공공채정의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퇴직공직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재직 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 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6호, 2023.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가 그 감사·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 행정심판법<br>시행령                                    | 2008. 2. 29.<br>일부개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                                                 | 2010. 7. 26.<br>전부개정  |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2015. 12. 30.<br>일부개정 | 사용자등록 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등록하도록 규정                                                                                                                                                                                                                                       |
|                                                 | 2016. 10. 4.<br>일부개정  | 제척 및 기피신청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행정심판법<br>시행령 | 2017. 3. 27.<br>일부개정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타법개정)                                                                                                                                                                                |
|              | 2017. 10. 17.<br>일부개정 | 간접강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              | 2018. 4. 17.<br>일부개정  | 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              | 2018. 10. 30.<br>일부개정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절차 및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2020. 7. 14.<br>일부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타법개정) |
| 공무원<br>행동강령  | 2008. 11. 5.<br>일부개정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규정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공무원<br>행동강령 | 2008. 12. 31.<br>일부개정 |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             | 2016. 9. 27.<br>일부개정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 |
|             | 2018. 1. 16.<br>일부개정  |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며, 공직자가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                                                                                                                                                                                                                                                                                                                                                                  |

| 시행령명        | 제 · 개정 일자             | 제 · 개정 이유                                                                                                                                                                                                                                                                                      |
|-------------|-----------------------|------------------------------------------------------------------------------------------------------------------------------------------------------------------------------------------------------------------------------------------------------------------------------------------------|
| 공무원<br>행동강령 | 2018. 12. 24.<br>일부개정 |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     |
|             | 2020. 4. 7.<br>일부개정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                                                                                                                                                |
|             | 2022. 6. 2.<br>일부개정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지방의회의원<br>행동강령 | 2010. 11. 2.<br>제정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                                                                                                                                                                                                                      |
|                | 2016. 9. 27.<br>일부개정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 |

| 시행령명           | 제·개정 일자               | 제·개정 이유                                                                                                                                                                                                                                                                                               |
|----------------|-----------------------|-------------------------------------------------------------------------------------------------------------------------------------------------------------------------------------------------------------------------------------------------------------------------------------------------------|
| 지방의회의원<br>행동강령 | 2018. 12. 24.<br>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 2020. 4. 7.<br>일부개정   |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                                                                                                                                                    |
|                | 2022. 6. 2.<br>일부개정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2 소관 시행규칙 제정 · 개정 · 폐지 현황

| 시행규칙명         | 제 · 개정 일자            | 제 · 개정 이유                                                                                                                                                                                                             |
|---------------|----------------------|-----------------------------------------------------------------------------------------------------------------------------------------------------------------------------------------------------------------------|
| 행정심판법<br>시행규칙 | 2008. 3. 3.<br>일부개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                                                                        |
|               | 2010. 8. 11.<br>전부개정 |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2012. 9. 20.<br>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



| 시행규칙명                                     | 제 · 개정 일자             | 제 · 개정 이유                                                                                                                                                                                                           |
|-------------------------------------------|-----------------------|---------------------------------------------------------------------------------------------------------------------------------------------------------------------------------------------------------------------|
| 행정심판법<br>시행규칙                             | 2017. 10. 19.<br>일부개정 | 간접강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항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                                           | 2018. 11. 1.<br>일부개정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10. 30. 공포, 1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 |
|                                           | 2020. 6. 19<br>일부개정   |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
| 국민권익위원회<br>소관 비영리법인의<br>설립 및 감독에<br>관한 규칙 | 2015. 8. 7.<br>제정     | 「민법」에서 위임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그 감독에 사항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24일까지로 그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대체 규정을 시행규칙(총리령)으로 상항 제정                  |